

KMI 동향분석

VOL.180
2022 MARCH

발간년월 2022년 3월(통권 제18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감 수 마창모·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연구진)의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다각화된 여성어업인 역할 고려한 수산업 · 어촌 환경 만들어 가야

홍해수 어촌삶의질연구실 실장
(doubleh@kmi.re.kr/051-797-4903)
박찬엽 수산양식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pcy0814@kmi.re.kr/051-797-4569)

1990년대 이후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문제는 어업 노동력 부족, 어촌소멸 등 산업적·지역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여성어업인은 부족한 어업 노동력 공급과 어촌사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정책적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통한 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하여 1차산업 참여 여성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2011년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야 수립되었는데, 동 기본계획 또한 농업 중심 정책 구성으로 어업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2017년에 이르러 여성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동 기본계획은 ‘어업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와 ‘어촌사회의 안정적 발전’, ‘수산업·서비스업 융복합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여성 역할 증대’, ‘양성평등 정책 본격 추진’ 등을 배경으로 하여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해 어업·어촌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올해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국내 여성어업인에 대한 논의가 산업적·지역적 문제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국제적인 논의는 성평등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FAO는 식량부문 성평등 실현을 위해 UN SDGs와 연계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수산업 내 여성의 역할과 기여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인식 해소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여성어업인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성어업인의 실상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202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녀어업인 간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상당수(85.7%)는 본인의 선택 또는 가업을 잇기 위해 어업에 종사하지만, 여성어업인의 경우 응답자의 78.4%가 배우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은 선택의 개념으로서, 여성은 보조의 개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 대해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대다수(98.4%)는 본인을 어업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성어업인 응답자의 31.0%는 본인을 경영주가 아닌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여성어업인은 본인의 지위를 도움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가소득 창출을 위한 어업생산, 어획물 가공, 어획물 판매와 장비구입과 같은 주요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다른 가구 구성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어업인은 다양한 어업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높은 분야는 식료품 구매 등으로 가사노동과 밀접한 소규모 가계지출에 한정되었다.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도 남녀어업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어업인이 하루 평균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각각 8.1시간, 8.4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어업인은 대부분의 노동시간(7.3시간)을 유급노동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여성어업인이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4.4시간으로 그 외 4시간은 가사노동, 무급가족 노동, 가구원 돌보기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여성어업인이 여전히 어가 내 무급노동과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나잡어업, 맨손어업, 연안승선 등을 비롯하여 어촌 내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과거부터 어업은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제한된 특성을 가지며, 성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향후 수립될 여성어업인 정책은 여성어업인의 산업적·사회적 역할 다각화에 대한 고려와 함께 어업 내 구조적 불평등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국내 정책이 개별 여성의 인적자본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에서 나아가 향후 수립될 정책은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고민하며,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양질의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달성 방안으로 여성어업인 논의 본격화

■ 국내 어가인구 고령화 및 감소추세 확대, 어업종사가구원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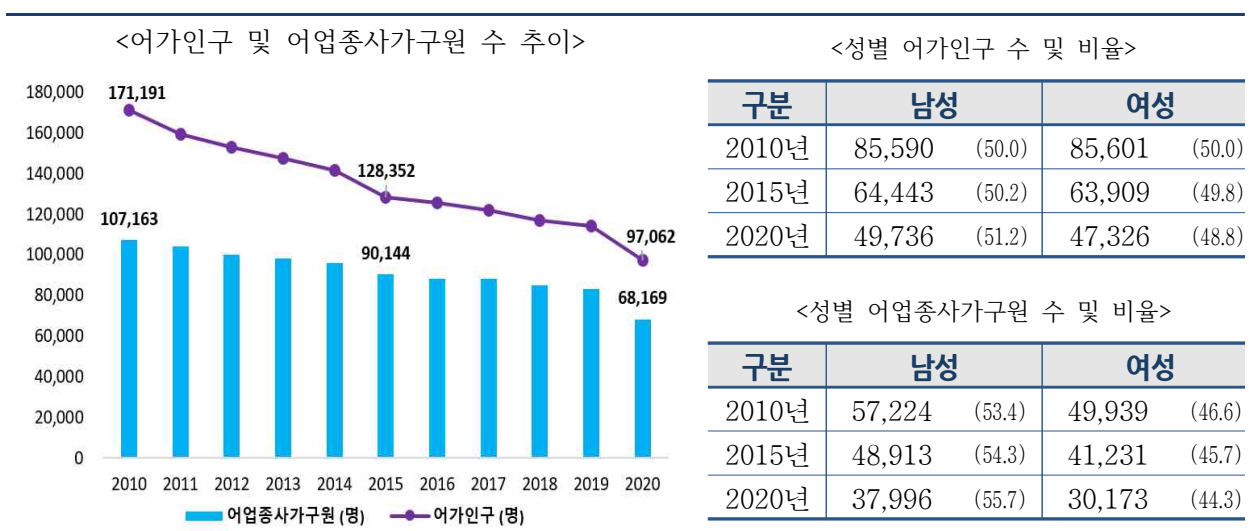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어가 및 어가인구 변화의 주요 특징은 지속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 확산으로 볼 수 있음¹⁾
 - 어가인구는 2010년 171,191명에서 2020년 97,062명으로 연평균 5.5% 감소
 -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2010년 23.1%에서 2020년 36.0%로 12.9%p 증가
 - 유소년 인구(2010년 15,698명, 2020년 5,570명), 총인구 대비 어가인구 비율(2010년 0.4%, 2020년 0.2%) 등 어가인구 관련 주요 지표에서도 감소세 확인
-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가 내 어업종사가구원 수 또한 2010년 10만 7천 명에서 2020년 6만 8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만 9천 명이 감소하였음

■ 2020년 기준 어가 내 여성 비율 48.8%, 어업종사가구원은 44.3% 차지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어가 내 여성인구는 47,326명으로 48.8%를 차지하며 여성 어업종사가구원은 30,173명으로 44.3%로 조사됨
- 여성 어가인구 대비 여성 어업종사가구원 수의 비율은 2010년 58.4%에서 2020년 63.8%로, 전반적인 어가 인구 감소세에서도 여성은 어가 내 어업종사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어촌의 노동참여 주체로 역할을 공고히 함

그림 1. 어가인구 및 어업종사가구원 수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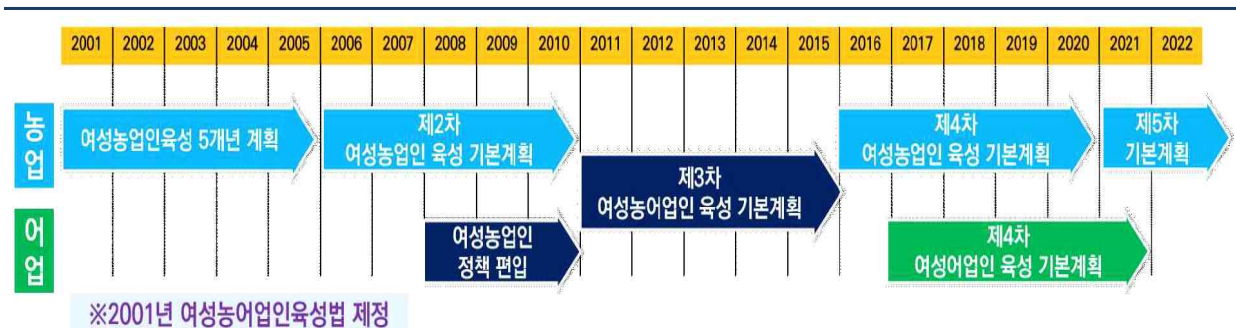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2. 3. 11) 및 농림어업총조사(검색일: 2022. 3. 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검색일: 2022. 2. 7),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p. 74~85.

■ 어촌계 소멸, 인력 부족 등 어촌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여성어업인 육성 필요성 대두

- 1990년대 이후 어가인구 감소를 비롯하여 어업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어촌사회의 기능, 어가 및 어업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²⁾ 어촌계 소멸, 어업 종사인력 부족 등 어촌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여성어업인 육성 논의가 본격화됨³⁾
- 여성의 어업 생산 참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서야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됨
 -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1차산업 참여 여성에 대한 정책추진이 본격화됨
 -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2001년)은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신설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어업인이 포함된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나 농업 중심의 정책으로 어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짐
 -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정책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흐름



자료: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 53

-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어업인 육성을 인구감소, 고령화, 인력 부족에 직면한 어촌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함⁴⁾
 - 계획 추진 배경으로 ‘어업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및 어촌사회의 안정적 발전’, ‘수산업과 서비스업 융복합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여성 역할 증대’, ‘양성평등 정책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제시함⁵⁾
 - 주요 전략으로 여성어업인 정책 기반구축, 전문성 강화 지원, 삶의 질 향상에 초점

2) 이창수 박지훈(2017), 「여성어업인 어업노동 실태와 지원방향」, pp. 13~17.

3) 이창수 박지훈 임종선(2019), 「여성어업인 어촌 비즈니스 지원 방향」, pp. 3~5.

4) 해양수산부(2017),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 p. 1.

5) 위의 책 p. 3.

여성어업인 역할 다각화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권한 재분배 미흡

■ 나잡어업, 맨손어업 중심에서 연안어선 승선까지 어촌 내 여성어업인 역할 지속적 확대

- 여성어업인은 어업활동과 더불어 조업 준비, 어구수선, 선별작업 등 어획 후 처리 작업과 수산물 유통·판매 등 어업활동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⁶⁾
-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또한 어구 및 어획물 초기 손질에서부터 승선 조업까지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조명하며, 노동 참여 주체로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함⁷⁾
- 202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실시한 여성어업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성어업인은 맨손어업(29.1%), 패류양식(23.6%), 나잡어업(18.2%), 어선어업(13.5%), 해면어류양식(11.5%)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에 이어 가사노동 또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
- 나아가 여성어업인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어촌관광 지원, 어촌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어촌 유지에도 기여하며, 어업과 어촌사회 지속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됨⁹⁾

■ 어촌계, 수협 조합원 등 어업·어촌 관련 조직 내 여성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비중 낮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는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¹⁰⁾
- 이는 국가가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 비율 증가와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구별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30%에 이르면 따라 여성조합원 비율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권한 분배의 필요성을 법률화한 것임¹¹⁾
- 그러나 전국 수협의 조합원 수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15만 4천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여성 조합원 수는 5만 3천 명으로 34.3%를 차지하나, 비상임이사의 경우 전체 622명 중 여성은 49명(7.9%)으로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존재함¹²⁾
- 또한, 전국 어촌계장 2,309명(2019년 기준) 중 여성 어촌계장은 49명으로 2.1% 수준에 그치며, 어촌 관련 조직 내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¹³⁾

6) 어업인수산(2019. 12. 11), “여성어업인 어촌비즈니스 활동 지원 강화 필요”.

7) 위의 책, p. 2.

8)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 125, p. 152.

9) 해양수산부, 앞의 책, p. 2.

10) 「수산업협동조합법」(2021. 1. 1., 법률 제17007호)

11) 「수산업협동조합법」(2014. 6. 19., 법률 제12481호), 제정·개정이유

12) 어민신문(2021. 7. 2), “일선수협 여성 지도자 비중 낮다”

13) 위의 자료

국제사회 수산부문 성별 직종분리 조명, 여성역할 증진 기반 강조

■ FAO, 수산업 내 여성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지적 및 동등한 기회 제공 중요성 강조

-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이하 FAO)는 2020년 FAO Policy on Gender Equality 2020-2030(FAO 성평등 정책)을 발표함¹⁴⁾
 - 여성권리 향상과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규범 제시 및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한 향후 10년간 식량부문에서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성격차 발생의 원인이 사회적 인식(고정관념,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성 권리향상을 위해 동등한 권한과 통제력 확보, 공정한 이익분배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함

표 1. FAO Policy on Gender Equality 2020-2030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목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촌개발에서의 양성평등 달성 및 기아와 빈곤 해소
세부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과 남성은 법률체계·정책·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기관·조직에서 동등한 자격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2. 여성과 남성은 자연 및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 개발의 기여와 수혜를 받는 데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3. 여성과 남성은 서비스, 시장,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 소득과 이익에 대해서도 동등한 통제 권한을 가진다. 4. 여성의 기술, 실습,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부담은 가사일을 포함하여 공평한 책임분배를 통해 감소시킨다.

자료: FAO(2020), "FAO Policy on Gender Equality 2020-2030", pp. 5-9

- FAO는 평등한 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여성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동등한 기회 제공 및 여성의 접근성 향상, 역할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¹⁵⁾
 - '어업·양식업에서의 성평등 진흥을 위한 리플릿(2016)을 통해 가사, 영양공급, 전처리, 판매 등 다양한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특히, 남성 중심의 수산업 구조, 즉 주로 남성으로 집계되는 가구주 중심의 데이터 수집 체계에서는 여성의 활동 및 기여가 책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수산부문 전반에 동등한 기회 제공의 중요성, 여성의 접근성 향상 등 역할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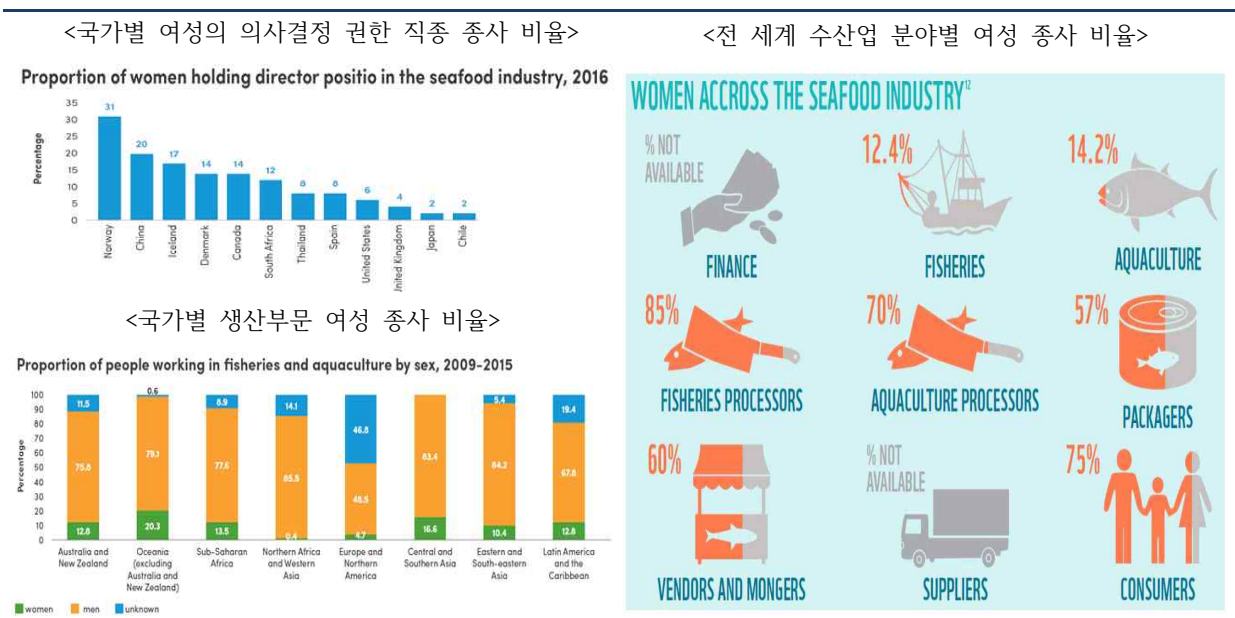
14) FAO 성평등 정책은 여성어업인을 포함하여 식량생산, 자원분배, 지역 개발 등 1차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 40)

15) FAO(2016),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pp. 1-11.

■ UN 여성기구, 세계자연기금 수산업·성별 직종분리 현상 지적

- UN 여성기구(UN Women)는 세계적으로 수산업에서 여성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주요 활동으로 여겨지는 어업, 양식업 등 생산활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함¹⁶⁾
 - 유럽,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 비중은 남성에 비해 크게 낮고, 여성은 주로 어획 후 처리 등 2차 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 종사자 비중은 노르웨이(31%)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 이하로 집계됨
 - 종사자 성별에 관한 정보 수집이 미흡한 현행 통계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수산업에서 여성의 기여와 활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함
-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¹⁷⁾ 또한 전 세계 수산업에서 나타나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조명하였는데, 생산 및 금융 활동과 같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업무에서는 여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함
 - 여성들은 주로 가공·포장·판매 등 어획 후 처리 과정에 종사하고, 생산 분야, 금융관리 등의 업무에서의 성별 격차가 나타남
 - 환경보호 및 보존의 측면에서 여성들의 권한 증진, 성평등 실현의 필요성을 제시함

그림 3. 국제기구별 수산업 성별 직종분리 현황



자료: (왼쪽) UN Women(2018), "Turning promises into action gender equality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 122
(오른쪽) WWF(2019), "Empowering women in marine communities to mitig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p. 4

16) UN Women(2018), "Turning promises into action gender equality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p. 12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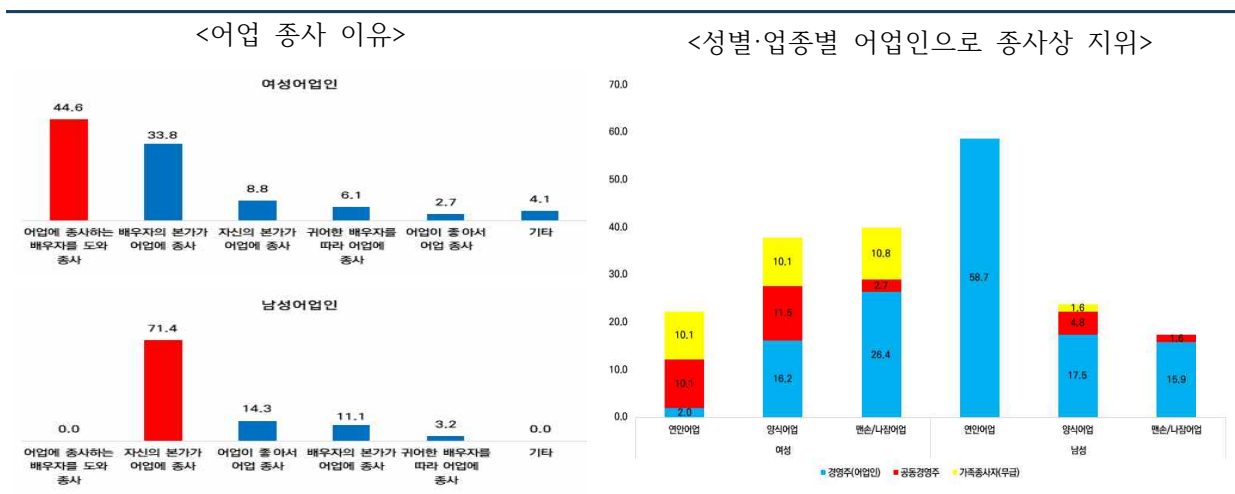
17)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부 자연보호 국제기구로, 해양, 담수, 야생동물, 기후 에너지, 식량, 산림 등 종합적인 보전 활동을 수행함

여성어업인 자신을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¹⁸⁾

■ 어업인 성별에 따라 어업 종사 이유와 종사상 지위 인식에 뚜렷한 차이

- 국내외에서 수산업 내 성평등 실현과 여성어업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1년 실태조사¹⁹⁾를 통해 어업인 성별에 따라 노동환경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음
- 성별에 따른 노동 환경과 종사상 지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어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와 어업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조사하였으며, 남녀어업인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함
 - (종사 이유)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80% 이상은 가업을 잇거나 본인 선택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어업인은 주로 배우자를 도와 어업에 종사하거나 배우자 가업을 잇기 위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²⁰⁾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90% 이상이 자신을 어업 경영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어업인 응답자의 30% 이상은 본인을 경영주가 아닌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어선어업이 주를 이루는 연안어업에서 두드러짐
- 즉, 여성어업인은 어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가 내 일손 돕기 일환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신을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4. 노동실태와 지위에 관한 남녀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주: 전체 응답자 211명(여성: 연안 33명, 양식 56명, 맨손/나잠 59명, 총 148명)(남성: 연안 37명, 양식 15명, 맨손/나잠 11명, 총 63명)

자료: (왼쪽)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 128

(오른쪽) 위의 책, p. 133

18)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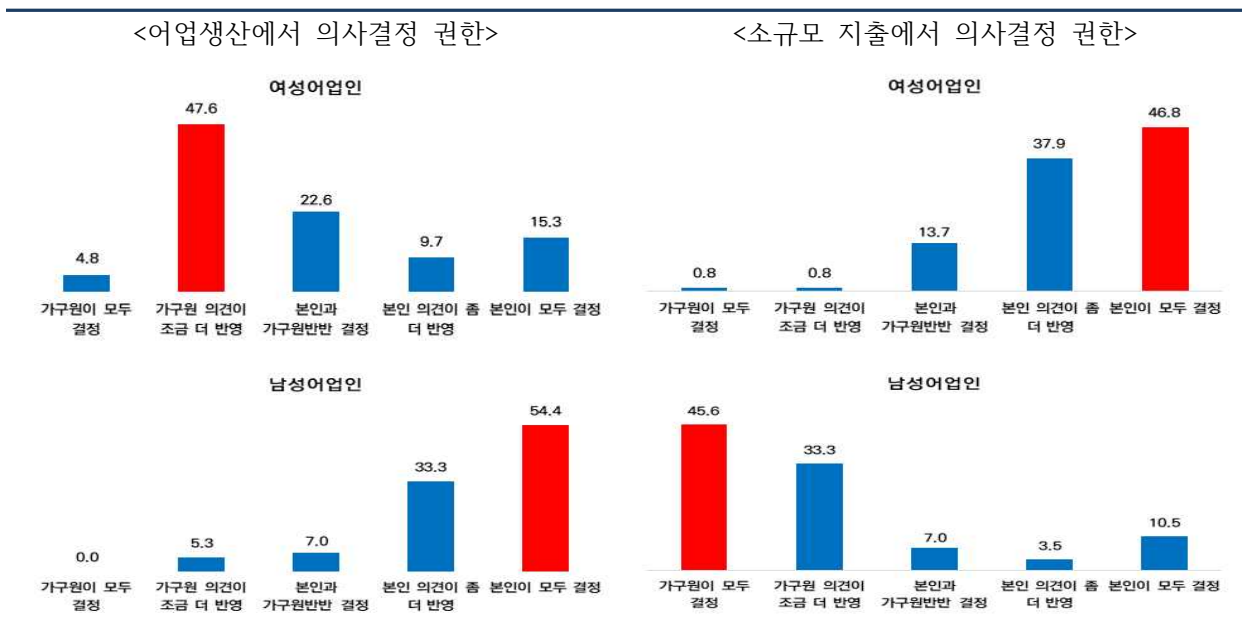
19) 본 실태조사는 미 국제개발처(USAID), 국제식품정책연구소(IFPR)의 농업여성권한지수(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를 참고하여 어업인 성별에 따른 지위와 권한, 시간 활용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연안어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종사자 211명(남 63명, 여 148명)을 대상으로 함

20) 종사자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의미하는 종사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치가 높고 권한이 큰 경영주부터 공동경영주, 가족 내 무급종사자, 가족 내 유급종사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가족 내 유급종사자 응답은 없어 이를 제외함

■ 어가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성어업인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부족

- 어가 내 의사결정 유형은 어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어업생산, 어획물 가공, 판매 등을 결정하는 과정과 어가 내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어가소득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어업인은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타 가구원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어업인은 타 가구원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어업생산)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80% 이상은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다른 가구원의 의사결정 권한보다 크다고 인지한 반면,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는 여성어업인은 25%에 불과함
 - (어획물 가공) 남성어업인은 본인이 모두 결정(32%), 본인 의견이 조금 더 반영(19%) 순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어업인은 본인과 가구원 반반 결정(27%), 본인이 모두 결정(16%) 순으로 응답함
 - (어획물 판매) 남성어업인의 경우 본인이 모두 결정(54%)한다는 응답이 과반이나, 여성어업인은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44%)이 주를 이뤄 차이를 보임
- 어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결정 중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고 인식되는 것은 식료품 구입과 같이 가사노동과 밀접한 일상적 가계지출만이 유일함
 - (주요 지출) 장비 구입 등에 있어 남성어업인은 본인 의견이 더 반영(33%), 본인이 모두 결정(26%) 순으로 답변하였으나, 여성어업인은 본인 의견이 더 반영(27%), 본인과 가구원 반반(27%) 순으로 응답함
 - (소규모 지출) 여성어업인과 남성어업인 모두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크다고 답변하여 다른 의사결정과 달리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어가 내 의사결정 권한 관련 남녀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주: 전체 응답자 181명(남성 응답자 수 57명, 여성 응답자 수 124명으로 기존 응답자 중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왼쪽)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 135

(오른쪽) 위의 책, p. 142

여성어업인 어가 내 무급노동 전담, 가사활동 등 노동 이중고 노출

■ 어업인 생활시간조사²¹⁾에서 필수시간과 여가시간 활용 차이는 크지 않아

- 생활시간조사에서 사람의 시간 활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잠, 식사 등 필수시간과 일, 학습, 가사노동 등의 의무시간, 그 외 문화, 여가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여가시간임
- 실태조사 결과, 남녀어업인 모두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과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필수시간) 남녀어업인은 하루 평균 9.7시간(580분)을 필수시간에 사용하며, 이 중 수면에 6.7시간(403.2분), 식사 및 간식 섭취에 2시간(122.0분), 개인위생에 55분을 사용함
 - (여가시간) 미디어 이용, 휴식 등에 남성어업인은 6.1시간(364분), 여성어업인은 5.9시간(35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무시간 활용에 있어 남성은 유급노동, 여성은 무급노동 비중 높아

- 어업노동, 가사노동, 가구원 돌보기, 학습 등으로 이뤄진 의무시간 활용에서 남성어업인은 하루 평균 8.1시간(489분), 여성어업인은 8.4시간(504분)을 할애하며, 하루 평균 약 15분의 차이를 보임
- 성별에 따라 할애하는 노동의 성격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어업인은 가사노동과 더불어 어가 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급노동은 어업활동, 어업 외 활동이며, 무급노동은 어가 내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어업 등의 가족노동과 가사노동, 가구원 돌보기를 포함
 - (유급노동) 남성어업인은 하루 평균 의무시간의 90%인 7.3시간(438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반면, 여성어업인은 의무시간의 절반 수준인 4.4시간(262분)만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급노동) 가사노동, 무급가족 노동, 가구원 돌보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성어업인의 경우 하루 평균 51분에 불과하지만, 여성어업인은 4.0시간(242분)으로 가사노동 부담이 여성에게 전담되고 있음을 시사함
- 즉, 가구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1차산업 특성²²⁾으로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어가 내 무급노동과 유급 어업활동에도 참여하며, 유·무급 노동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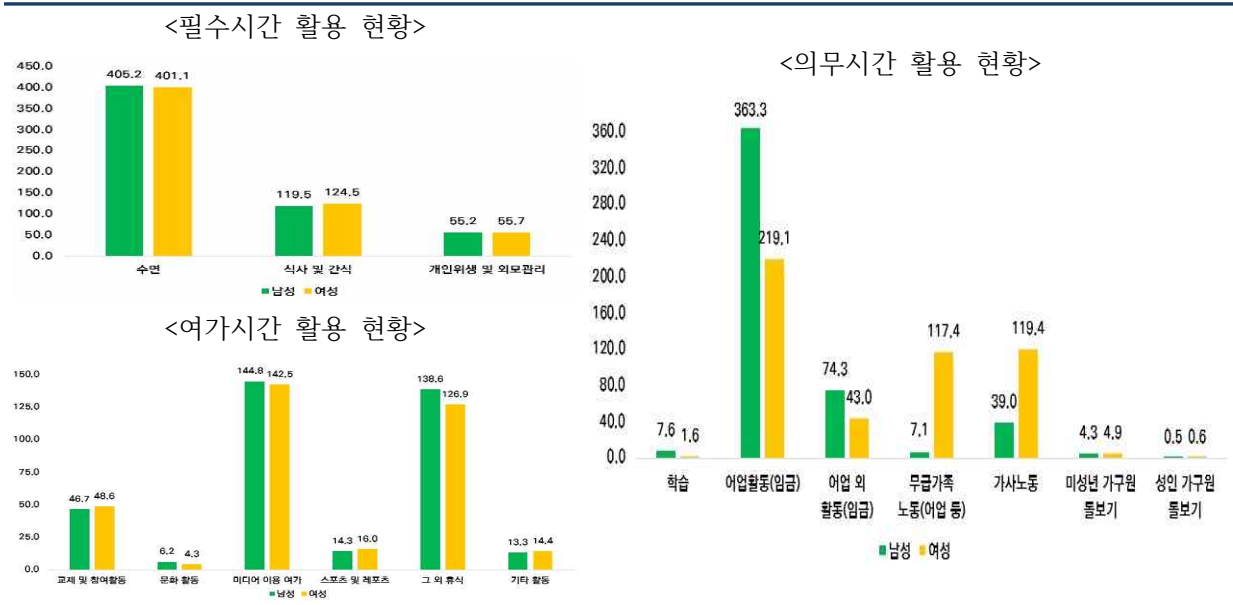
21) UNDP의 권고로 국민 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행동을 10분 이상 수행한 경우 해당 행동으로 시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현행 생활시간조사는 농림어가, 비농림어가로 구분됨에 따라 어업인에 특정하여 생활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홍혜수 외(2021)는 UNDP 행동분류표를 바탕으로 일 평균 세부 활동을 구분하였으며,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어가 특성을 고려하여 유급 노동을 어업활동, 어업 외 활동, 무급노동을 무급가족 노동, 가사노동, 가구원 돌보기로 세분화함

22) 유소이 외(2003),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p. 158.

- 나이가 여성어업인에게 무형의 무급노동이 전담되는 양상은 이들이 남성어업인과 동일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 부담이 요구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함

그림 6. 남녀어업인 생활시간조사 결과



주: 전체 응답자 211명(여성어업인 148명, 남성어업인 63명)

자료: (왼쪽 위)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 152

(왼쪽 아래) 위의 책, p. 154

(오른쪽) 위의 책, p. 152

여성어업인 양질의 노동환경 마련 등 다방면의 정책적 접근 필요

■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제한된 어업노동의 특성상 불평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²³⁾

- 어업이 완력을 기반으로 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점에서 일에 대한 참여와 접근성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님
- 이는 여성어업인으로 하여금 임금, 가사노동, 권한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부터 내재된 차별 또한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고착화할 가능성을 시사함
- 이에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은 어업 내 구조적 불평등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어업·어촌사회에서 여성의 다양한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수립할 필요가 있음

23) 홍혜수 외(2021), 「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 p. 202.

■ 여성어업인의 산업적·사회적 역할 다각화에 상응한 균형 잡힌 사회구조 마련이 중요

- 여성어업인은 어업활동을 비롯한 선별, 어획 후 처리작업 등 다양한 산업적 역할과 가사노동, 어촌사회 유지 등 무형의 사회적 기여를 수행함에도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환경적 여건은 미흡함
- 향후 여성어업인 정책은 당면 현안과 문제점을 개선함에 있어 다각화된 역할과 기여를 고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균형잡힌 어업·어촌사회 구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함
 - 여성어업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균형잡힌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성어업인이 암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 노동,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함

표 1. 여성어업인 부문별 주요 현안 및 개선방향

부문별 주요 현안 및 여건	개선방향
지구별 수협이사, 어촌계장 등 여성의사결정권자 및 여성리더의 부족 ·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견 배제, 대표성 미흡	여성어업인 의사를 반영하는 균형잡힌 의사결정구조 구축 지원
배우자, 어가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수 · 사회적 위치와 권한이 낮은 보조적 역할로 인식	여성어업인 직업적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방안 모색
무급 가족노동, 가사노동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노동과 가사의 불명확한 경계, 기여에 대한 가치 평가 미흡	노동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립 및 공감대 형성
어촌의 가부장성, 남성친화적 노동환경으로 여성어업인 참여 제한 · 주도적 역할 수행의 한계점으로 작용	여성 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지원

자료: 홍혜수(2021), 「어촌사회의 여성어업인 지위와 역할 제고 방향」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양질의 노동환경 제공, 여성 친화형 어업기반 마련으로 여성어업인 활동 증진해야

- 기존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은 개별 여성의 인적자본 향상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향후에는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양질의 노동환경 제공과 지위향상, 일과 삶의 균형 등 다방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일제로, 완력을 기반으로 한 어업 특성을 해소하는 중장기적 여성 친화형 작업기반 구축과 안전 교육 지원을 통한 작업 안전 강화와 같은 양질의 노동환경 구축 정책은 여성어업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더불어, 여성어업인이 보조적 존재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어업·어촌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여 인정을 위한 사회적 역할 부여, 의사결정 참여 등 지위 향상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여성어업인 단체 활동 지원 및 기능 확대, 여성어업인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장려 등 여성 어업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여성어업인 정책은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개선, 어촌 인력 문제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궁극적으로 어업·어촌사회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정책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동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확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업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 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업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업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햇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업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업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방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업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업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업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사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업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조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상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물식품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2019.11.28.
제162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2019.12.09.
제163호	해양수산 창업 실태 및 시사점	2019.12.27.
제164호	2019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관계	2019.12.30.
제165호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	2020.02.18.
제166호	이상고온으로 해조류 공급 차질 우려 수급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020.03.03.
제167호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2020.03.31.
제168호	해양공간계획·행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마련해야	2020.04.29.
제169호	코로나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입식' 관리가 우선되어야	2020.05.22.
제170호	해양수산 관점에서의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2020.06.16.
제171호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2020.06.22.
제172호	COVID-19에 따른 선원수급 및 선박검역 대책마련이 시급	2020.07.03.
제173호	포클랜드 입어 정책 변화 예고, 국내 오징어 수급 대응 방안 마련해야 - 2020 한중남미수산물포럼 개최 결과를 중심으로 -	2020.10.30.
제174호	공유경제, 청년구어인의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넘는 사다리가 되어야...	2020.11.06.
제175호	한-러 '북극협력 2.0' 시대를 여는 新 북극전략 수립 필요	2021.02.02.
제176호	글로벌 수산물 소비 구조 변화 고려, 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	2021.02.16.
제177호	중국의 '연해 사요파이 운송' 완화, 전해상황에 미치는 영향 미미	2021.12.07.
제178호	가정 간편식(HMR) 시장 확대, 수산물식품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2022.02.16.
제179호	완전자동화터미널,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서 그 안정성을 증명하다	2022.02.16.
제180호	다각화된 여성어업인 역할 고려한 수산업·어촌 환경 만들어 가야	2022.03.31.

URL: <https://www.kmi.re.kr/>